

# 부동산 거래세 부담의 국제비교 ('22년)

신미정 선임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 개요
-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동향
- 향후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변화 예상

# 부동산 거래세 부담의 국제비교('22년)

신미정 선임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 OECD Revenue Statistics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의 최근 부동산 거래세수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분석
  - OECD Revenue Statistics의 '재산과세(4000) - 금융 및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4400)' 자료에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구분 가능한 국가에 대해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을 비교대상으로 함
  - OECD 국가들의 거래세 세부담 비교를 위해 총조세 대비, GDP 대비,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각 국가들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분석
  - 경기변동 등 부동산 거래 변동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거래세 세부담 분석을 추가하여 비교
- 202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총조세 대비 및 GDP 대비, 민간부동산 대비 모두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4.26%로 OECD 국가 평균(1.86%)과 중간값(1.57%)를 크게 상회
  -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1.01%로 OECD 평균(0.49%)과 중간값(0.41%)을 훨씬 상회
  -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0.17%로 호주(0.25%)보다는 낮으나 10개 비교국의 평균값인 0.1%와 중간값 0.09%에 비해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2020~2022년 평균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부동산 거래세의 총조세 대비 및 GDP 대비, 민간부동산 대비 모두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 최근 3년 평균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5.53%로 OECD 국가 평균(1.92%)의 약 3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상위
  -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1.20%로 OECD 평균(0.48%)과 중간값(0.42%)을 훨씬 상회
  -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0.20%로 호주(0.19%)와 함께 상위 수준

- 최근 10년(2013~2022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전 기간 OECD 평균과 중간값을 상회하였으며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p 증가( $4.02\%^{(13)} \rightarrow 6.13\%^{(21)}$ ) 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의 중간값과 평균이 안정 혹은 하락하는 추세에 반해 급격한 증가
  -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2013년 0.68%에서 2021년 1.34%로 약 2배 가량 증가 하였으나 2022년 1.01%로 축소
  - 민간 부동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13년 0.14%에서 2021년 0.22%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0.17%로 감소
- 그간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증가는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 급증,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거래량 감소, 거래가격 하락으로 인해 2022년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지수 하락으로 다소 거래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주택공급활성화 대책 등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01

## 개요

○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OECD가 발표하는 **Revenue Statistics** 등을 활용하여 세부담 수준을 비교

- OECD Revenue Statistics는 세목별로 소득과세(1000, 3000), 재산과세(4000), 소비과세(5000), 기타과세(6000)로 구분하여 세수 현황을 공개
- 사회보장기여금(2000)은 별도로 구분
- 부동산 거래세는 재산과세(4000) 중 '금융 및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자료를 활용
- 거래세(4400)는 부동산 외 금융자산 등 거래 시 과세를 모두 포함하므로 부동산 거래세수 구분이 가능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함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OECD 데이터로는 부동산 거래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일부 국가의 경우 국가 통계사이트를 활용하여 비교

○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총조세, GDP, 민간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여 OECD 국가 간 평균값과 중간값을 비교하였으며 연도별 변동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을 함께 비교

- 총조세, GDP 및 민간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여 OECD 국가별 2022년도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수준을 비교함
- 또한 부동산 거래는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부동산 거래의 연도별 변동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거래세 세부담을 비교함
-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의 장기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및 중간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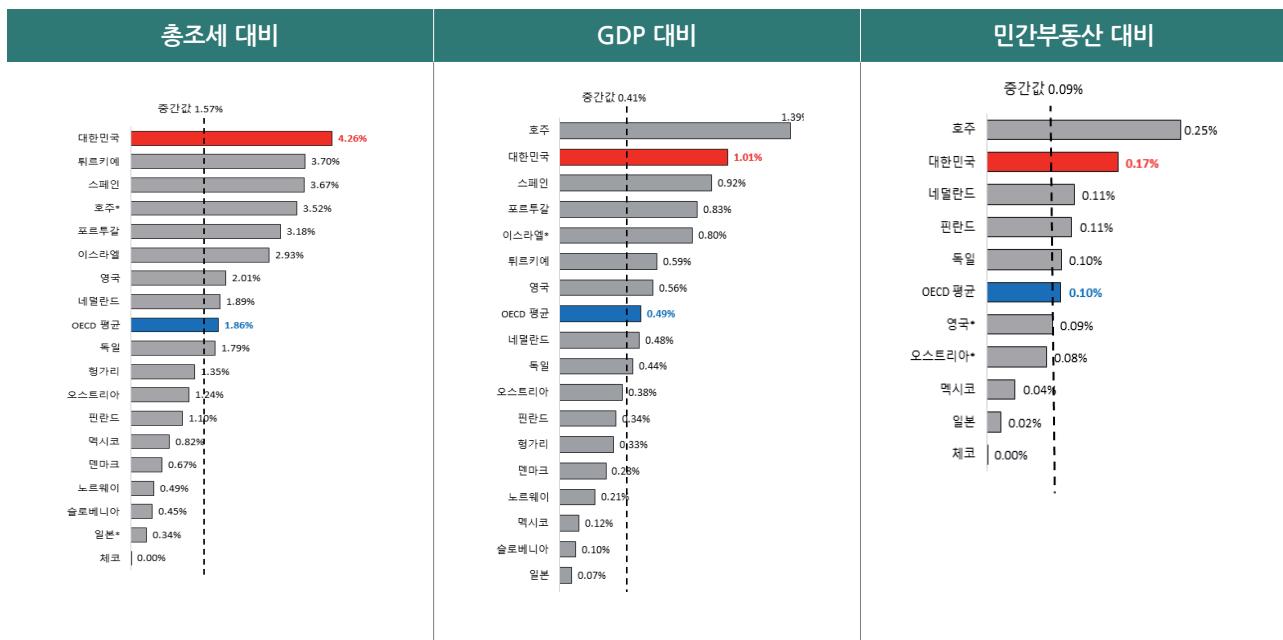
## 02

##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동향

### ○ 202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수준은 총조세, GDP,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4.2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1.86%)과 중간값(1.57%)를 크게 상회
- 우리나라를 뒤이은 튀르키예(3.70%)와 스페인(3.67%)과도 큰 차이
-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호주(1.39%) 보다 낮은 1.01%로 OECD 평균인 0.49%와 중간값인 0.41%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민간부동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비교대상 국가(10개국) 중 호주(0.25%) 다음인 0.17%로 평균인 0.10%와 중간값인 0.09%를 상회함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와 스페인, 튀르키예가 총조세, GDP, 민간부동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으며, 체코와 일본은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그림 1> OECD 국가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중(2022년도)



주: 1) \*는 2021년 자료를 사용한 국가이며, 점선은 중간값을 표기

2) 자세한 내용은 부표 참고

3) 영국은 영국 회계연도 기준인 당해연도 4월~다음연도 3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4. 2. 28일 접속);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영국 정부공식사이트(<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stamp-tax-statistics>); 호주 통계청(<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taxation-revenue-australia>)

## ○ 우리나라의 최근 3년 평균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역시 총조세, GDP, 민간부동산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sup>1)</sup>

- 부동산 거래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변동을 통제하고자 최근 3년의 평균값을 비교
- 2020~2022년 평균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5.53%로 OECD 평균인 1.92%의 약 3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임
-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1.20%로 OECD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평균값인 0.48%와 중간값인 0.42%를 훨씬 상회함
- 민간부동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0.20%로 호주(0.19%)와 함께 최상위 수준임

1)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이 높은 원인에 대해 거래세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으나, 부동산 거래빈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함(안성서·박지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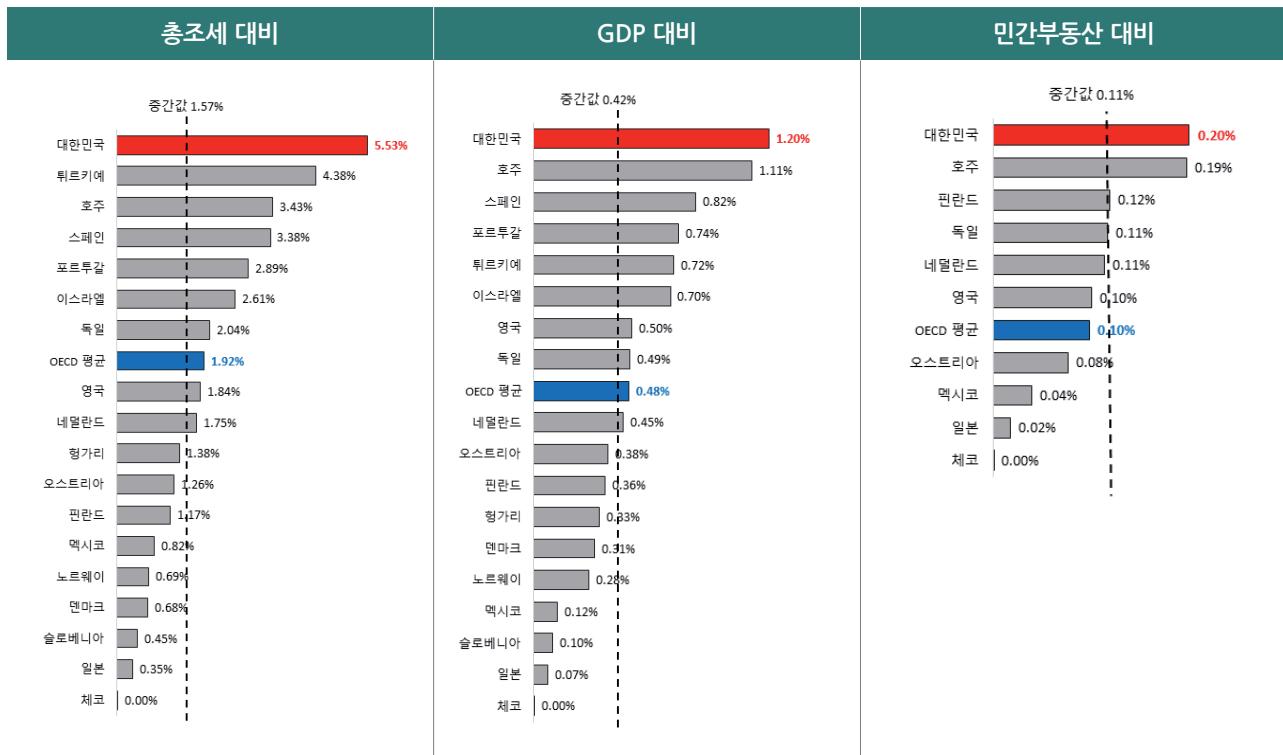
〈표〉 주요국의 주택매매회전율 추이(2017년)

한국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매매회전율	총거래회전율							
5.5	8.8	3.6	4.5	5.3	2.7	2.8	2.1	0.6

주: 한국의 거래세 세수에는 매매 이외 무상취득에 대한 거래세도 포함되므로 부동산 거래세 세수 설명 시 총거래회전율이 더 적합(안성서·박지현, 2021)

출처: 조세재정연구원(2021), 〈표 4〉

〈그림 2〉 OECD 국가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중(2020~2022년 평균)



주: 1) \*는 2021년 자료를 사용한 국가이며, 점선은 중간값을 표기

2) 자세한 내용은 부표 참고

3) 영국은 영국 회계연도 기준인 당해연도 4월~다음연도 3월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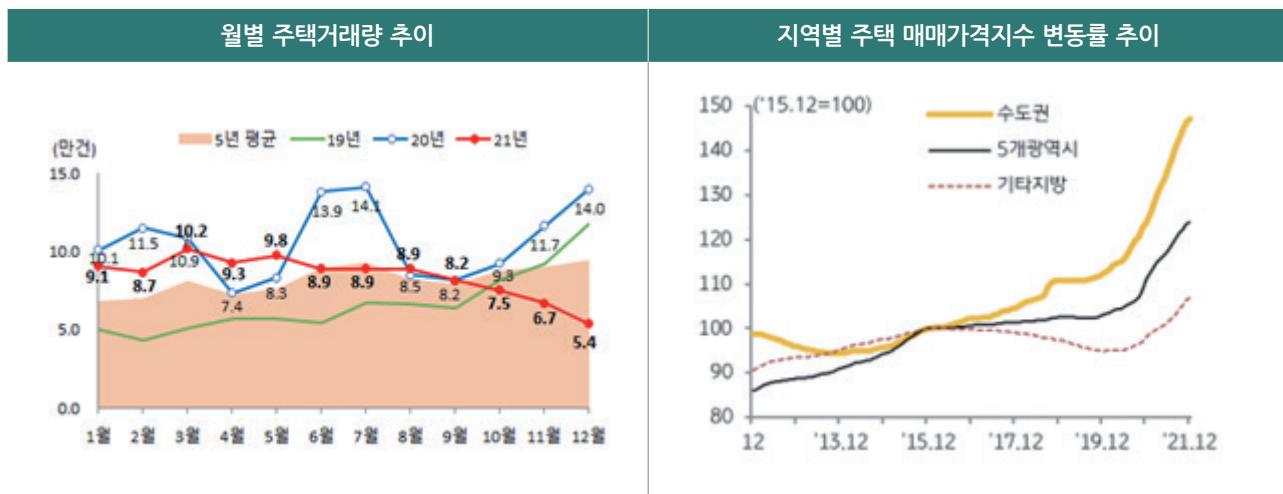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4. 2. 28일 접속);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영국 정부공식사이트(<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stamp-tax-statistics>); 호주 통계청(<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taxation-revenue-australia>)

## ○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전 기간 동안 OECD 평균과 중간값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2019년 이후 더욱 증가하였으나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

- 우리나라의 10년간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2013년 4.02%였으나 2020년 6.20%로 2%p 증가하여 OECD 평균이 약 2% 수준임에 비해 세부담이 높은 수준이며 그 변동폭이 큼
- GDP 대비 역시 2013년 0.68%에서 2021년 1.34%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22년 1.01%로 0.33%p 감소함
- OECD 평균이 0.34%에서 0.49%로 10년간 0.15%p 증가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의 변동폭이 큼
- 민간부동산 대비는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13년 0.14%에서 2021년 0.22%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0.17%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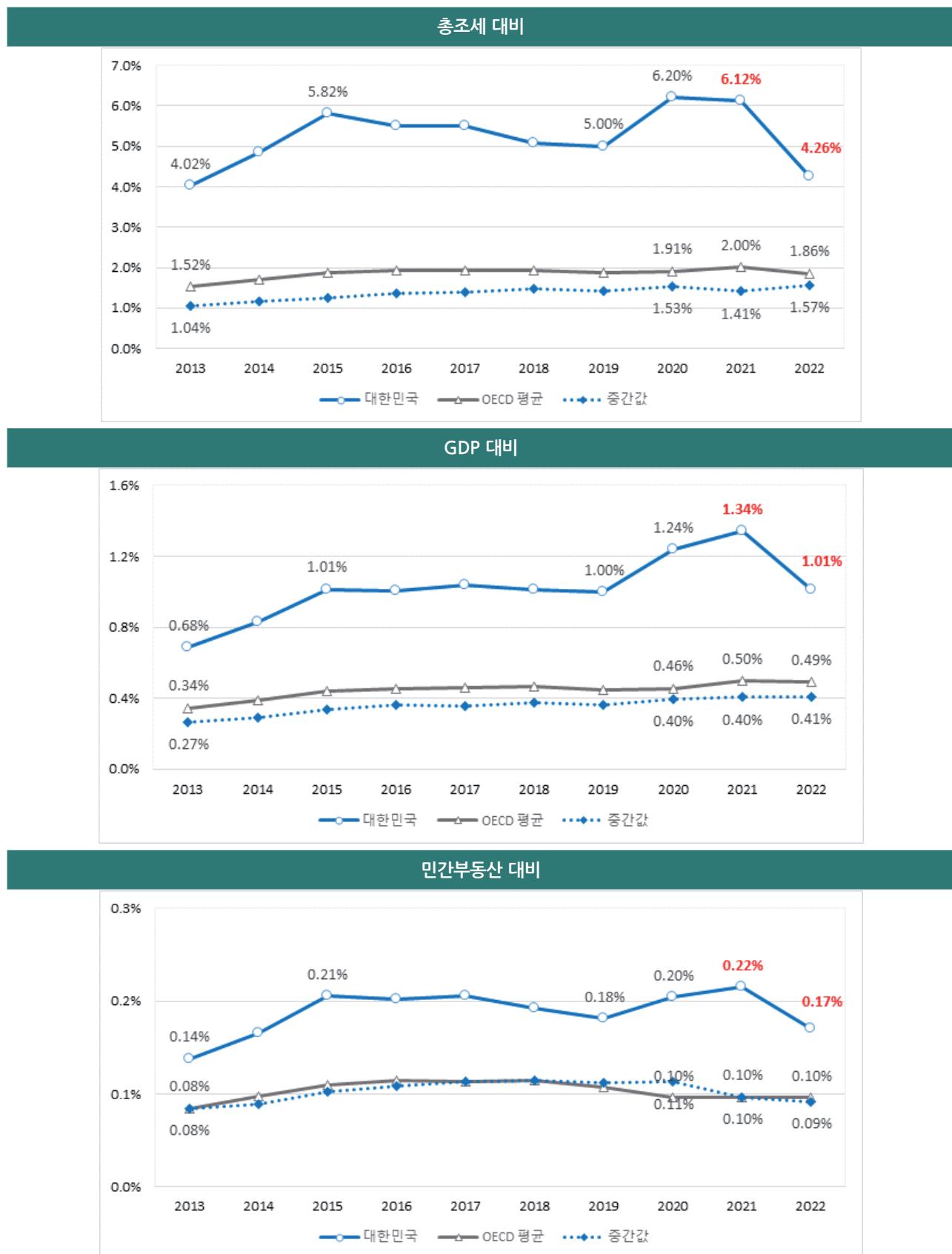
- 2022년은 전년에 비해 총조세, GDP, 민간 부동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기 이전인 2019년도 수준으로 회귀함
- 2019년 이후 부동산 거래세 부담의 높은 상승률은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의 급증과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됨(이슬이, 2023)

<그림 3> 월별 주택거래량 및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2021년 이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2.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2.1.)

&lt;그림 4&gt; 최근 10년간 한국 및 OECD 국가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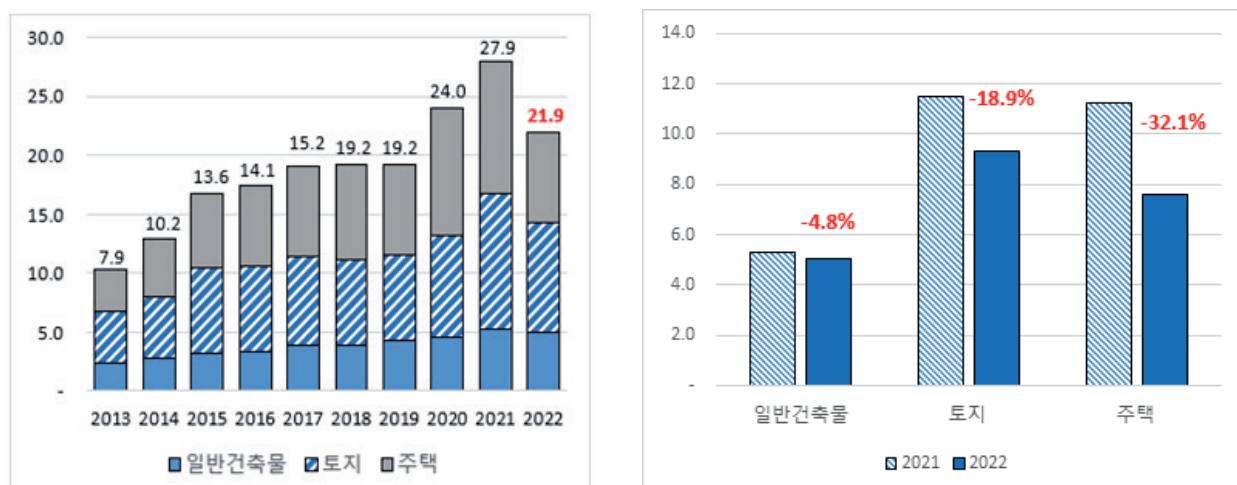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4. 2. 28일 접속)

○ 2022년 취득세 부동산분 부과세액은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6.0조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택분 취득세가 전년대비 △32.1% 감소

- 우리나라는 부동산인 주택, 토지, 건축물의 유상 및 무상 등의 여러 원인으로 취득 시 취득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이외 자동차, 항공기, 기계장비 등의 취득 시에도 과세함
- 2022년도 취득세 부동산분은 전년대비 △25.4%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택분 취득세는 7.6조원으로 전년의 11.2조원에 비해 △3.6조원 감소하였음
- 취득세 부동산분 부과건수 역시 2021년 290.6만 건에서 2022년 226.5만건으로 전년대비 △22.1% 감소하였으며 주택분 취득세는 동기간 157.9만 건에서 108.5만 건으로 전년대비 △31.3% 감소하였음
  - 취득세 부동산분 부과건수: 292.1만 건<sup>(20년)</sup>→290.6만 건<sup>(21년)</sup>→226.5만 건<sup>(22년)</sup>
  - 취득세 주택분 부과건수: 176.3만 건<sup>(20년)</sup>→157.9만 건<sup>(21년)</sup>→108.5만 건<sup>(22년)</sup>
  - 취득세 토지분 부과건수: 115.8만 건<sup>(20년)</sup>→132.7만 건<sup>(21년)</sup>→118.0만 건<sup>(22년)</sup>

〈그림 5〉 취득세 부동산분 세수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표 1〉 최근 5년간 취득세 부동산분 부과세액 및 건수 추이(2018~2023년)

(단위: 조 원, 만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과세액	전체	15.2	14.9	19.4	22.7	16.9
	주택	4.0	4.3	4.6	5.3	5.0
	토지	7.2	7.2	8.5	11.5	9.3
	건축물	8.0	7.7	10.9	11.2	7.6
부과건수	전체	266.0	249.4	292.1	290.6	226.5
	주택	44.3	45.7	48.6	53.7	48.0
	토지	116.0	111.0	115.8	132.7	118.0
	건축물	150.0	138.4	176.3	157.9	108.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03

## 향후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변화 예상

### ○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래량과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20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점차 상승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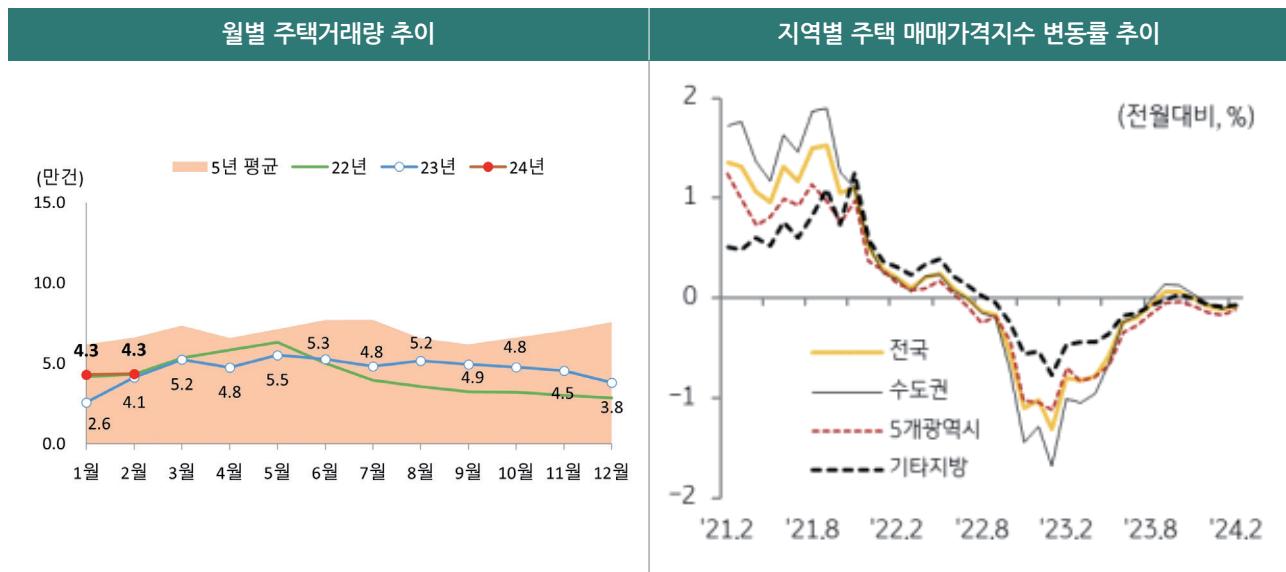
-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 거래량은 2020년 202.2만호로 전년대비 28.8%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은 162.1만호로 전년대비 약 △20% 감소, 2022년은 93.3만호로 전년대비 △42.4% 감소하여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임
  - 2023년도 주택 거래량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인 93만호가 거래됨
- 2024년도 월별 주택거래량은 4.3만건으로 최근 5년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전년도 보다는 증가하여 20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역시 2023년 2월 최저점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음
- 이는 주택시장 위축 및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 발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4)
  - 규제지역 축소, 전매제한 기간 축소(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 실거주의무, 중도금대출 금액제한 등 폐지

〈표 2〉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 거래량 변화(2019~20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택 거래량(만호)	156.9	202.2	162.1	93.3	92.9
전년대비	-8.7%	28.8%	-19.8%	-42.4%	-0.5%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그림 6〉 월별 주택거래량 및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3.2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4.3.)

- 2023년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지수 하락으로 인해 다소 거래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주택공급활성화 정책 등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의 감소 추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23년 9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및 2024년 1월 '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자세한 내용은 부표 참고)
-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주택거래 증가로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은 2023년 대비 다소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미분양, 거래량, 건설실적)”, 2022.2.3.일자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속도 낸다”, 2023. 9. 23일자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2024. 1. 10일자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2024. 3. 28일자 보도자료
- 안성서·박지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택 거래세 세부담 비교”, TIP 제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stamp-tax-statistics>)
- 이슬이,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TIP 제9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 권성오,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재정포럼」, 통권 제208호, 2021. 4.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taxation-revenue-australia>)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주택시장리뷰”, 2022. 1.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주택시장리뷰”, 2024. 3.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부록>

<부표 1> OECD 국가 거래세 세부담 비중(2022년도)

총조세대비		GDP 대비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중앙값	1.57%	중앙값	0.41%	중앙값	0.09%
대한민국	4.26%	호주	1.39%	호주	0.25%
튀르키예	3.70%	대한민국	1.01%	대한민국	0.17%
스페인	3.67%	스페인	0.92%	네덜란드	0.11%
호주*	3.52%	포르투갈	0.83%	핀란드	0.11%
포르투갈	3.18%	이스라엘*	0.80%	독일	0.10%
이스라엘	2.93%	튀르키예	0.59%	OECD 평균	0.10%
영국	2.01%	영국	0.56%	영국*	0.09%
네덜란드	1.89%	OECD 평균	0.49%	오스트리아*	0.08%
OECD 평균	1.86%	네덜란드	0.48%	멕시코	0.04%
독일	1.79%	독일	0.44%	일본	0.02%
헝가리	1.35%	오스트리아	0.38%	체코	0.00%
오스트리아	1.24%	핀란드	0.34%		
핀란드	1.10%	헝가리	0.33%		
멕시코	0.82%	덴마크	0.28%		
덴마크	0.67%	노르웨이	0.21%		
노르웨이	0.49%	멕시코	0.12%		
슬로베니아	0.45%	슬로베니아	0.10%		
일본*	0.34%	일본	0.07%		
체코	0.00%	체코	0.00%		

주: \*는 2021년 자료를 사용한 국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4. 2. 28일 접속); 영국 정부공식사이트(<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stamp-tax-statistics>); 호주 통계청(<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taxation-revenue-australia/2021-22#data-downloads>)

〈부표 2〉 OECD 국가 거래세 세부담 비중(2020~2022년 평균)

총조세대비		GDP 대비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중앙값	1.57%	중앙값	0.42%	중앙값	0.11%
<b>대한민국</b>	<b>5.53%</b>	<b>대한민국</b>	<b>1.20%</b>	<b>대한민국</b>	<b>0.20%</b>
튀르키예	4.38%	호주	1.11%	호주	0.19%
호주	3.43%	스페인	0.82%	핀란드	0.12%
스페인	3.38%	포르투갈	0.74%	독일	0.11%
포르투갈	2.89%	튀르키예	0.72%	네덜란드	0.11%
이스라엘	2.61%	이스라엘	0.70%	영국	0.10%
독일	2.04%	영국	0.50%	<b>OECD 평균</b>	<b>0.10%</b>
<b>OECD 평균</b>	<b>1.92%</b>	독일	0.49%	오스트리아	0.08%
영국	1.84%	<b>OECD 평균</b>	<b>0.48%</b>	멕시코	0.04%
네덜란드	1.75%	네덜란드	0.45%	일본	0.02%
헝가리	1.38%	오스트리아	0.38%	체코	0.00%
오스트리아	1.26%	핀란드	0.36%		
핀란드	1.17%	헝가리	0.33%		
멕시코	0.82%	덴마크	0.31%		
노르웨이	0.69%	노르웨이	0.28%		
덴마크	0.68%	멕시코	0.12%		
슬로베니아	0.45%	슬로베니아	0.10%		
일본	0.35%	일본	0.07%		
체코	0.00%	체코	0.00%		

주: \*는 2021년 자료를 사용한 국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4. 2. 28일 접속); 영국 정부공식사이트(<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stamp-tax-statistics>); 호주 통계청(<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taxation-revenue-australia/2021-22#data-downloads>)

### 〈부도 1〉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 공공은 주택 공급목표 달성 및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 견인
- ◆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 유도

#### 중점 추진과제

민간 공급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li> <li>❷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li> <li>❸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li> </ul>
	사업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li> <li>❷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li> <li>❸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li> <li>❹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li> <li>❺ 인허가 절차 개선</li> <li>❻ 건설인력 확충</li> <li>❼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li> </ul>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PF대출 보증 확대</li> <li>❷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li> <li>❸ 중도금 대출 지원</li> </ul>
	非아파트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li> <li>❷ 非아파트 규제 개선</li> </ul>
	도심공급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li> <li>❷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li> </ul>

**<부도 2> 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b>도심 공급 확대</b>	<b>재건축·재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li> <li>❷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li> <li>❸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li> <li>❹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li> </ul>
	<b>1기 신도시 재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li> <li>❷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li> <li>❸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li> </ul>
	<b>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li> <li>❷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li> <li>❸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li> <li>❹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li> </ul>
<b>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b>	<b>공급 여건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도시·건축규제 완화 ❷ 세제·금융지원</li> </ul>
	<b>활용도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구입 부담 경감 ❷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li> <li>❸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❹ 신축매입약정 확대</li> </ul>
	<b>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❷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li> <li>❸ 종합 지원체계 강화 ❹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li> </ul>
<b>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b>	<b>공공주택 공급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24년 공공주택 14만호+<math>\alpha</math> 공급</li> <li>❷ 공공주택 민간 참여 확대</li> </ul>
	<b>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물량 확대: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li> <li>❷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li> </ul>
<b>건설경기 활력 회복</b>	<b>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PF대출 지원 ❷ 유동성 지원</li> </ul>
	<b>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지방 사업여건 개선</li> <li>❷ 공공임대 참여지분 조기 매각</li> </ul>
	<b>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공적 조정위원회 ❷ 민간 사업장 공공 인수</li> <li>❸ 정상화 펀드</li> </ul>
	<b>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공사 재개 지원 ❷ 수분양자 보호</li> <li>❸ 협력업체 보호</li> </ul>
	<b>건설투자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재정 조기집행 ❷ 민자사업 확대</li> </ul>